

숨n



채희락

관광학 박사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장

국제관광에서 변하지 않는 정론이 있다. 국가 간의 거리이다. 여행의 경우 거리는 비용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행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용(거리와 관련 있는 항공료, 승선료 등)은 증대되고 이에 따라 관광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해외관광객 수출과 유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1차 타겟시장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중일 3국의 관광시장은 요동쳤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멈춰있는 상태이다.

한중일 관광대전 1차전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따른 한한령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한한령은 2017년 3월에 한국의 사드

한일 관광대전(大戰), 3차전 시작

배지를 이유로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여행상품 판매금지에서 시작되었다. 한국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중국 최대 여행사인 씨트립을 비롯해 취남왕, 투니유 등의 중국 대형 여행사들이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숙박업, 도소매업, 쇼핑업 등 관광업계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해외관광객 유치에서 앞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현상은 상반되는 이면이 있다. 중국의 한국관광상품 판매중단은 방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방중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도 있었다.

2차전은 한한령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연간 300만 명 이상의 방중 관광객이 목적지를 일본으로 선회하였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의 대체관광지로 일본을 선택했다. 일본의 국가경제 전략인 아베노믹스(Abenomic)의 핵심전략사업으로 관광을 선정하고 이후 철저한 사전 준비도 시의 적절하게 한몫했다. 해외관광객 유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앞질렀던 시

기와 맞물린다. 연간 해외관광객 2천만 명을 가뿐히 유치했다. 목표 또한 원대했다. 2020년 예정되었던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4천만 명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안전보장 우호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 등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반향도 뜨거웠다. 단합된 국민 행동을 보여주었다. ‘NO 재팬’, ‘NO 아베’, ‘재팬, 사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이번만큼은 일본 여행은 가지 않겠다’라는 등 다양한 기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넘쳐나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 8월 상수기에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48% 감소했고, 9월에는 58%, 10, 11월에는 65% 줄어드는 등 시간이 갈수록 감소 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을 주 타겟으로 삼았던 일본 지방 소도시들이 치

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일본 내에서도 속속 나오기도 했다.

3차전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국제관광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3차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쿄 올림픽을 1년 연기하였다. 올림픽은 관광을 포함한 국력을 집중할 대규모 이벤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중국의 대표 여행기업인 트립닷컴그룹의 시트립(Ctrip, 携程)에서 방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의 해외관광객 유치에 발목을 잡았던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한령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시장 다변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었으나, 한중일 국제관광 관계에서 영향력이 높은 중국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이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별기고

공공체육시설, 개방 필요하다



채신덕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김포2)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영위하는 계층을 홈(Home)족이라 부른다. 코로나19 창궐도 이유지만 스스로 집에서 삶을 즐긴다. 사회 생활에 부작용으로 압박을 두려워하는 ‘방콕족’과는 구별된다.

집을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꾸미는 ‘홈케이프(Home+Escape)’,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홈캉스(Home+Vacance)’, 카페처럼 집을 만드는 ‘홈카페’, 예능인이 방송에서 보여준 ‘나레바’ 그리고 코로나19 침체속 급성장한 출장 청소·세탁·방문수거 서비스도 이들 홈족이 주도한다.

여기에 홈트레이닝도 그중 하나다. 여러 사람이 밀집해서 체육과 체육이 곳곳에 묻어있고 밀폐된 공간인 헬스장을 피하러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모 스타트업 온라인 PT 프로그램은 수강 신청이 급증한 것은 안전하게 운동하고 싶은 단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홈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로 진행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때 슬기로운 홈족생활로, 그리고 홈족생활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며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인 한정된 공간속 피로감이 일체치를 넘어 부작용으로 전환되는 시대상황이다.

운동을 예로들어 보자. 코로나19 일상속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된다. 운동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실내와 실외 중에서 어디가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필자는 실외가 더 안전하다에 한 표를 던지겠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운동은 해야한다. 아

침, 저녁시간 공원, 하천변 등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운동은 우리 일상속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기도의회 회기중 수원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 도청 후문을 거쳐 팔달산 둘레길을 걸어봤다. 얼마 가지 않아 약속터가 나오고 베드민턴장이 나온다. 베드민턴장 입구는 하얀색 테이프로 칭칭이 감겨있고 별도 안내 시까지 무기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안내문구도 보인다.

바로 옆 공터에서는 베드민턴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베드민턴을 치고 있다. 야외 베드민턴 시설을 폐쇄는 했지만 베드민턴으로 운동삼아 체력을 유지해 오신 분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공공업무보고시 공공체육시설 중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다. 지금 공공축구장이 폐쇄되자 공을 차고픈 아이들의 몸비듬이 시작됐다. 그러자 부모들은 관례로 지어진 또는 천막처럼 지어진 사설 축구장, 풋살장에서 시강당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아이들

에게 폐쇄된 시설에서 운동을 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폐쇄되었다. 언제 다시 개방할지 알 수 없다. 어떤 곳은 개방되어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 공공인자, 민간시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것은 확실하다.

공공시설 개방은 중대본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판단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개방할 수도,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폐쇄보다 개방이 훨씬 쉽다. 공공체육시설 개방은 저비용 고효율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에 향후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체육시설 폐쇄는 감염 방지라는 명분속 면피 행정일 수도 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용방식을 준수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이 개방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시대, 식당, 술집, 병원보다 공공체육시설은 안전할 수 있다. 무조건적 공공체육시설 폐쇄보다 합리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공공체육시설 개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

당·정·청, ‘그린벨트 해제’ 잘못 건드렸다 혼쭐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잘못 건드렸다 혼쭐이 나고 있다. 지난 7·10 대책발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4일에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홍 부총리 발언을 바로 뒤 잡았다. 그리고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했다.

논란은 범여권으로 옮겨 붙었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실거주 여부를 따져 정밀적으로 중과세해야 한다”며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그린벨트 문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인 시기이기 전에 너무 쉽게 풀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결국 정세균 국

무총리가 “그린벨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 시도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정·청의 ‘갈지(之)자 행보’에 시장 혼란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소유 골프장 용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공식 제안하자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그린벨트) 일대 집값도 들쭉이고 있다는 뉴스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기관인 비베이트가 20일 발표한 총 1만3천298명의 투표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표자의 94%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불안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당·정·청이 화급히 공급책을 찾다가 ‘그린벨트’ 해제를 건드린 것은 실수다. 정부는 뭉툭한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가능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역을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심도있는 논의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오로지 도민과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표’ 정책들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 같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정책은 기본소득과 더불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전국 확대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자신의 2018년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를 다시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투자용 토지에 대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균등 환급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관련 증세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는 단기적으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운용한 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법을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주장은 헌법상 토지공개념, 즉 토지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혁명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여부와 세부세율은 공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재원) 형태로 거둬 전액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는 과하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0.5%의 최대세율을 제안했지만 이조차도 세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 본보(17일자 3면 특집)의 권고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빛을 내 다주택 건물을 산 뒤 임대업을 하면서 이자를 충당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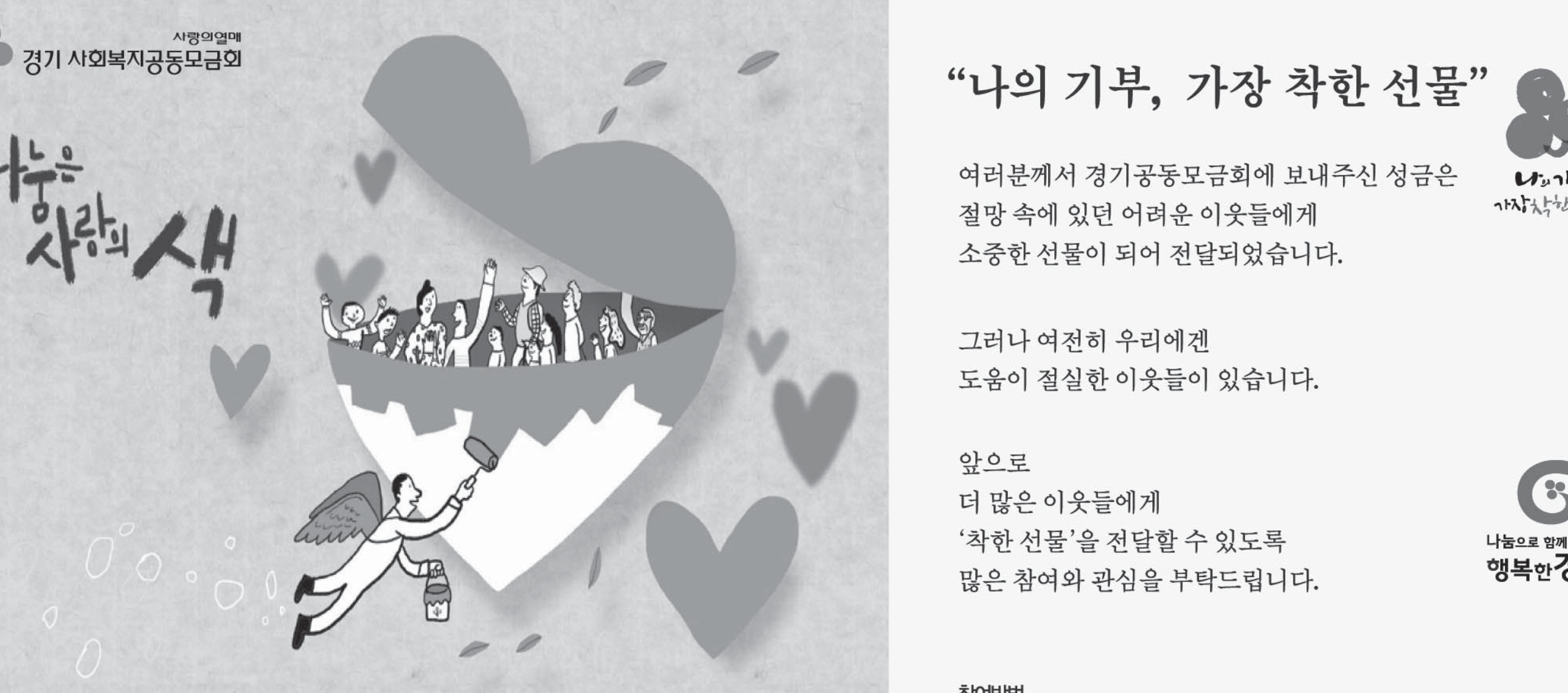
여러분께서 경기공동모금회에 보내주신 성금은 절망 속에 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착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의기부
가장착한선물



기부상담 ☎ 031-220-7932 ARS 기부 ☎ 060-700-0006(1통화 2,000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모금·배분 기관입니다. <http://gg.chest.or.kr>

일러스트: 재능기부 김영준

●성금: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무통장 입금: 농협/143-01-092152/경기공동모금회

●성품: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쌀, 연탄, 김치, 난방용품 등 기부



나눔으로 함께 웃는
행복한경기